

Section II

정책논단*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

* 경제논집 정책논단 54권 1호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16일 개최한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자본주의 대논쟁'에서 발표, 토의된 내용을 요약하였다.

한국경제, 동반성장, 그리고 자본주의의 정신⁽¹⁾

정 운 찬

한국경제가 복합위기에 빠진지 오래되었다. 저성장과 양극화가 좀처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1980년대에 연 8.6%, 90년대 6.7%이던 경제성장률이 2000년대 들어서는 4.4%로 하락하더니 2010년대에는 2~3%대까지 떨어졌다.

소득분배도 점점 악화되었고 삼성·현대·LG·SK 등 4대 재벌그룹이 1년에 올리는 매출액이 이제는 GDP의 60%에 육박할 정도로 재벌의존도가 커졌다. 경제적 힘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위험에 대한 노출이 증가할 뿐 아니라 경제 전체의 활력도 떨어지고 있다. 한국을 상징하는 표현이었던 “다이내믹 코리아”가 아득한 옛날처럼 느껴진다. 한국경제를 이대로 놔두면 경제가 쇠약해짐은 물론이요 언젠가는 사회 전체가 결속력을 잃고 견잡을 수 없는 혼란에 휩싸이게 될까봐 우려된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는 한편으로는 규제타파를 통해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주도 성장정책으로 개인소비가 늘어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규제가 투자의 주요 걸림돌이 아니다. 또한 개인소득은 증가를 유도하기 힘들 뿐 아니라 소득이 늘더라도 미래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소비가 늘어날 리가 없다. 한편 2012년 대선 공약과 달리 정부의 정책에서 양극화 완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은 찾아보기 어렵다.

나는 동반성장이 한국경제 위기를 극복할 만병통치약은 아닐지라도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성장하여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일이다. 있는 사람들로부터 빼앗아 없는 이들에게 나누어주자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면서 분배구조도 고치자는 것이다.

(1) 본고는 서울대 경제연구소가 2014년 12월 16일 개최한 학술대회 ‘21세기 한국자본주의의 대는쟁’에서 기초연설한 것을 수정, 요약한 것이다.

동반성장이 자본주의정신에 위배된다는 반론도 있다. ‘자본주의는 기업의 이익 극대화를 보장해 주어야 하는데 동반성장은 기업들이 이익 극대화를 하지 못하게 하자는 것이니 자본주의와 반대된다. 솔직히 말해 사회주의적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런 반론은 자본주의를 잘못 이해한 결과이다.

이익추구를 위한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은 자본주의 사상의 핵심이다. 그러나 이익추구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은 탐욕이다. 그것은 자본주의의 참모습이 아니다.

이익 극대화가 자본주의의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소위 자유시장 근본주의자(free market fundamentalist)들의 멘토는 시카고 대학의 밀튼 프리드만 교수였다. 그는 1970년 뉴욕 타임즈 매거진에 기고한 글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수익을 올리는 것이다.”라고 선언하였다. 그는 이익을 올리는 것 외에 기업의 책임을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주장을 펴는 사람들은 순수 사회주의를 설파하는 사람들이다”라고까지 말했다. 프리드만 교수의 이런 생각은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Neoliberal Capitalism)로 계승되어 1980년대 이후 세계를 풍미(風靡)했을 뿐 아니라, 우리사회에서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친재벌 성향의 경제학자 또는 오피니언 리더들의 입을 통하여 ‘이익 극대화만이 기업이 추구해야할 목표의 전부’라는 이데올로기로 되어버렸다.

그런데 그 기고문에서 프리드만 교수가 말했던 기업이란 법률을 준수하는(law-abiding) 기업이라는 전제가 있다. 법률을 준수하는 기업들의 유일한 사회적 책임이 이익 극대화라는 말이었지 이익극대화를 위해서라면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좋다는 것이 아니었다. ‘이익 극대화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자격이 있으려면 그 기업은 최소한 사회가 정한 모든 법률을 준수하는 회사라야 한다는 것이다. 법률을 어기는 것은 물론, 법망을 피해 교묘히 사적(私的)인 이익을 추구하다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왔던 기업인이라면 ‘이익 극대화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 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또한 프리드만 교수가 말하는 기업이란 “자본주의 게임규칙(rules of the game)을 준수하는 기업, 즉 속임수(deception)를 안 쓰고 사기(詐欺: fraud)를 치는 일 없이,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경쟁을 하는 기업이다.”⁽²⁾ 사회가 정한 모든 법률을 준수함은 물

(2) “there is one and only on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 to use its resources and engage in activities designed to increase its profits so long as it stays within the rules of the game, which is to say, engage in open and free competition without deception or fraud”

론, 법률 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기나 속임수 같이 시장 참여자들의 지탄(指彈)을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는 기업들이라면 그런 기업들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만이 있을 뿐이라는 얘기다. 이와 같은 이익 극대화의 전제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것이었으므로 굳이 강조하지 않았었기 때문인지, 프리드만 교수의 기고문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익 극대화가 전부’라는 부분만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전제로 했던 두 가지 조건은, 적어도 한국에서는, 거의 전해지지 않았다.

나는 한국의 자본주의는 밀튼 프리드만 교수의 주장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목전(目前)의 이익 극대화를 통해 주가를 극대화하고 나아가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이는 주주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기업 활동에 참여하는 이들 가운데는 근로자들도 있고 납품·협력업체들도 있으며 고객도 있다. 주주의 이익뿐 아니라 이들의 이익이 모두 극대화되어야 그 기업의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 근로자들과 납품·협력업체, 고객의 이익을 희생해 가면서 그 기업의 이익이 극대화되는 일은 상상하기 어렵다. 단기간에 걸쳐 설혹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오래가지는 못한다.

결국, 단기적 이익 극대화는 기업 활동의 중요한 측면이긴 하지만 그것을 기업목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은 단편적인 사고일 뿐이다. 한국의 자본주의는 이익 극대화를 유일한 기업목표로 간주하는 사고방식부터 버려야 한다. 이런 생각이 대기업들의 중소기업인들에 대한 부당한 관행을 정당화시켜주는 이론으로 악용되고 있다.

고객과 근로자, 협력업체들에게 성과가 합당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 한국의 자본주의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모습이다. 그것이 바로 동반성장의 한 모습이다. 동반성장은 ‘더불어 잘 사는 사회’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를 주는 사회’ ‘꿈과 도전을 기대할 수 있는 공정한 사회’를 모두 함께 만들어가자는 것이다.

동반성장의 원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보자. 시장경제에서 기계적인 완전 평등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람직하지도 않다. 모두를 똑같이 만들 수는 없다. 오히려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잘살아 보겠다는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경제발전을 이끌어 내는 강한 원동력의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한 분야의 성장 효과가 그 분야에만 고이지 않고 다른 분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경제는 순환이다. 한 경제를 구성하는 각 부문이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서 선순환 하도록 하는 것이 동반성장의 요체이다.

국민경제의 선순환을 시각적으로 표현한다면, 낙수효과(top-down track)와 분수효과(bottom-up track)의 두 가지 흐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낙수효과는 부자·대기업·성장산업 등 선도부문의 성장 효과가 아래로 흐르는 것이다. 과거 반세기 동안 한국경제는 선성장·후분배의 불균형 성장전략만을 무리하게 추구하다 이제는 낙수효과의 연결고리가 거의 끊어지게 되었다. 이 끊어진 고리를 다시 이어야 한다. 2012년 대선 과정에서 경제민주화 기치와 함께 논의되었던 재벌개혁이나 대기업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근절과 같은 대책들이 구체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저개발 상태에서는 성장이 최선의 복지정책이 될 수 있다. 1960~70년대의 한국경제가 경험했듯이, 소수의 선도부문을 선별하여 한정된 자원을 집중 지원하고 심지어는 일정 정도의 편법까지 용인해주면, 성장이 촉진될 뿐 아니라 고용이 확대되어 다수 서민층의 생활수준을 끌어올릴 수도 있다. 그러나 한국경제는 이미 그 단계를 지난 지 오래되었다. 이제는 불법·편법을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재벌개혁, 즉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고 과도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해야 하며 대·중소기업 간의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 후려치기나 기술탈취 등과 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해야 한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지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이러한 노력을 시장경제 원리의 파괴로 보는 부정적 시각이 아직도 남아 있다. 그렇지 않다. 오히려 불법과 편법, 그리고 경제력의 남용이야말로 시장경제를 파괴하는 요소이다. 만인이 법 앞에서 평등한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모든 국민에게 균등한 기회를 부여하는 공정한 경쟁질서를 창출하는 것이 시장을 바로 세우고 동반성장을 이끌어내는 길이다.

둘째로, 분수효과는 하도급 중소기업·비정규직 노동자·영세 자영업자 등 경제적 약자들의 소득증대가 거꾸로 대기업들이 생산하는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이어지는 것이다. 낙수효과의 정상화가 중요한 과제인 것은 틀림없지만, 이것만으로 한국경제가 봉착하고 있는 양극화와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다수를 차지하는 중산층 이하 국민의 고용과 소득을 늘리는데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내수가 확대되면 서민층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직접적인 효과뿐 아니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고용과 투자를 자극함으로써 성장을 가속화하는 간접적인 효과도 가져 올 것이다.

실제로 낙수효과와 분수효과의 선순환적 결합은 쉽지 않은 일이다. 개개인의 의식과 행동을 바꾸고 우리 사회의 법제도와 관행을 혁신해야 하는 지난한 과제이다. 그

러나 다른 길은 없다. 낙수효과와 분수효과를 결합하는 동반성장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러면 동반성장을 위해 당장 추진해야 할 정책적 과제는 무엇일까? 우선, 초과이익공유를 실행해야 한다. 대기업이 목표한 것보다 높은 이익을 올리면 그것의 일부를 협력중소기업에 돌려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고용안정을 꾀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시혜적인 것이 아니다. 보상적인 것이다. 초과이익의 적지 않은 부분은 납품단가 후려치기 등 불공정거래에 연유하기 때문이다. 둘째, 중소기업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고 자생력을 키워주기 위해 대기업들의 신규 참여 또는 확대를 금지하는 업종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가 조달청을 통해 물자를 조달할 때 일정부분 이상을 중소기업에 직접 발주하도록 하는 등의 노력이 당장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들은 기존의 불공정한 게임을 아래에서라면 대기업으로만 흘러가고여 있을 돈이 중소기업에 합리적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유도하는 조치들이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대기업 위주의 경제정책 기조를 중소기업 위주의 신산업 정책으로 바꾸어야 한다.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사람이다. 좋은 학생들을 중소기업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학자금 용자에 혜택을 준다거나 군복무에 혜택을 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중소기업 종사자가 대기업 종사자의 월급에 비해 일정 퍼센트 이상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위해 국가기관, 예를 들면 KOTRA가 대학, 중소기업 등과 협력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R&D 자금 배분을 대기업 위주에서 중소기업 위주로 바꾸어야 한다.

이상에서 말한 동반성장의 원리와 시책을 통해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 첫째, 단기적으로 경제성장이 촉진되고 장기적으로는 지속적 성장의 기초가 된다. 한국경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투자가 부진하였다. 대기업은 돈은 많으나 투자대상이 부족하고 중소기업은 투자대상은 있으나 돈이 없다. 따라서 투자증진을 위해서는 대기업에는 첨단, 핵심기술을 많이 제공해야 한다. 그것은 중기적으로는 연구 및 개발(R&D)의 방향전환, 즉 D에서 R로의 점진적 전환이 필요하고, 장기적으로는 교육 혁신을 통해 국민 전체의 창의성을 제고해야 한다. 이것들은 시간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단기적으로도 대기업으로 흐를 돈이 합리적으로 중소기업에 흘러가게 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임금상승이 이루어지고 지속적 성장의 기초를 쌓을 수 있다.

둘째, 동반성장은 여러 가지 양극화로 인한 사회갈등과 분열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부자와 빈자, 강남과 강북,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규직과 비정규직, 대기업과 중소기업 등으로 양극화된 사회는 경제적 효율은 물론 정치사회적 안정도 확보할 수 없지 않은가. 뿐만 아니라, 동반성장은 약자들의 생활을 개선함으로써 사전적 복지제도의 역할도 수행한다.

동반성장은 21세기 우리 사회의 시대정신(Zeitgeist)이다.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서민경제가 파탄 나고, 경제 전체가 붕괴되어 사회를 유지하기 힘들 수 있다. 그러나 그것에 성공하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한국경제가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다. 나아가 동반성장은 기업과 경제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21세기 글로벌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자 새로운 사회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근본 가치이다.

맹자가 말한 ‘항산항심론(恒産恒心論)’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백성들이 의·식·주가 넉넉할 때 비로소 ‘변하지 않는 도덕심’이 저절로 함양된다. 우리 사회가 양극화를 완화하고 성장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때 국민 모두가 남을 배려하고, 서로 관용하며, 건강한 공동체를 일구는 일에 앞장서는 훌륭한 시민으로 성숙할 수 있을 것이다.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명예교수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

동경대학총장 자문위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15 캠프리지하우스 9층

Tel: (02) 6419-9000

E-mail: ucchung@gmail.com